

[종합]

북한 수해복구 정부 71억 지원

정부는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생필품과 의약품 등 71억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이르면 내주초부터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피해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긴급구호 요청을 고려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긴급구호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야 긴급구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내주 초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한 달간 총 50만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북한측에 제안했으며 현재 북한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WFP의 방콕 소재 아시아사무국 폴 리슬리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WFP는 기존 식량 비축분의 감소분 보충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 호소 노력에 적극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ABC 방송과 AFP 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 정상회담 수행 거부 靑 “부끄러운 일이다”

청와대는 17일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 수행을 추진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정치인답게 역사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큰 안목에서 받아들여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결정은 미래지향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거절 이유 중 하나로 회담의제에 북핵관련 부분이 빠져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모르고 그러는 지 알면서도 평가절하하고 정부를 몰아붙이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느 경우라도 비중 있는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페루 강진 사망 500명 넘어

교민 인명·재산피해 없어

페루 남부를 강타한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500명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페루 소방당국 부책임자인 로베르토 오르노는 17일 “사망자의 수는 500~510명 선으로 증가했고, 부상자의 수는 1천6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잣대미 속에서 발굴되지 않은 시신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사망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페루 주재 한국 대사관의 정종렬 영사는 이날 이번 페루 대지진에서 우리 교민들의 인명 혹은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영사는 “250여 세대 800여명의 우리 교민들은 대부분이 수도 리마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도 없다”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주가 또 폭락... 1,640선도 붕괴

코스닥도 급락... 외국인 무더기 매도 이어져

주식시장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엔캐리트레이드 자금 청산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스피지수는 지난 16일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 이를 연속 폭락하면서 1,630선으로 밀려났다.

17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53.91포인트(3.19%) 하락한 1,638.07로 장을 마감하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다.

이날 지수는 미국증시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충격에서 다소 진정세를 나타내면서 개장 초기 1,705까지 상승했지만 곧바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급반전됐다.

특히 오후 들어 일본증시가 5% 이상 폭락하

는 등 아시아증시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1,640선마저 붕괴됐다.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874.81포인트(5.42%) 급락한 15,273.68로 마감했으며, 홍콩 H지수도 6% 넘게 하락하는 등 아시아증시가 동반 폭락했다.

외국인은 이날 8천78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전날 1조원대가 넘는 사상 최대 순매도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코스닥지수도 외국인의 매도 공세로 인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전날보다 15.59포인트(2.26%) 떨어진 673.48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0.46포인트(0.07%) 오른 689.53으로 출발한 뒤 기관·개인의 저가 매수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맞서며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 하락세로 방향을

굳힌 후 낙폭을 확대했다. 개인이 320억원, 기관이 219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외국인 58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하락 압력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또다시 급락할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로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보인 데다 엔캐리트레이드자금의 급격한 청산 우려에 따른 엔화 초강세 등으로 아시아 각국 증시가 동반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엔캐리 청산에 따른 엔화 강세 영향으로 112엔대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전날보다 100엔당 30.20원 폭등한 844.60원으로, 지난해 5월23일 848.90원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울산에 150층 높이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

서울시와 코레일이 울산 국제업무지구(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통합개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지역에 최고 620m(150층 안팎)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건립된다.

(조갑도)

서울시는 16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울산 철

도정비창 4만 2천㎡와 그 남쪽의 서부이촌동 12만 4천㎡를 합쳐 56만 6천㎡를 통합 개발하는 내용의 울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와 땅 소유주인 코레일이 울산 철도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의 연계개발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서부이촌동 부지에는 국제 여객, 물류 터미널과 유람선 선착장 등이 들어서고 한강에서 초고층 랜드마크를 거쳐 울산역~국제발명 주변~울산공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녹지축이 조성된다. /연합뉴스

기아차 임금협상 완전 타결

조합원 투표결과 58.2% 찬성... 합의안 가결

기아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17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사측과 합의한 임금협상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원의 58.2%(1만5천796명)가 찬성에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8천828명 가운데 2만7천163명이 참여해 94.2%의 투표율을 보였다.

주요 합의내용은 지난 13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따라 ▲기본급 7만5천원(기본급 대비 5.2%) 인상 ▲생계비 부족분 150%

지급 ▲전 차종 흑자전환을 위한 특별격려금 50% 지급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노조가 부결(반대 53.47%)시킨 1차 합의안에 ‘특별 격려금 50% 지급’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조만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조남홍 사장과 김상구 노조위원장 등 양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임금협상’ 조인식을 갖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아차는 지난 6월18일 노사 상견례 이후 두 달여간 끌어온 임금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고객서비스 향상 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안을 놓고 사측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일부터 합의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10일간 10차례(110시간)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한 생산손실은 2만3천645대, 3천451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아차는 추산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한총리 “재계가 엑스포 유치 앞장서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삼정총 총리공관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민관협력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가 유치를 신청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결정이 19일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전개해온 유치외교전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측에서는 한 총리 외에 강무현 해양수산, 송민순 외교통상, 김영주 산자부 장관 등이, 업계에서는 전경련 조석태 회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과 최현영 사장, LG전자 남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 SK(주) 신현철 사장, GS칼텍스 명예식사장, POSCO 이구택 회장 등 14개 단체 및 업체대표를 비롯해 박준영 전남지사,

김재철 유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특히 여수의 경쟁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가운데 모로코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공격적인 유치전에 나서면서 ‘모로코 경쟁력’이 내러진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대(對)모로코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여수에 비해 탕헤르가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로서 지명도가 높고, 아프리카 대륙 및 이슬람권에서 최초로 엑스포를 열어야 한다는 명분속에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모로코는 스페인, 프랑스 등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총리는 “재계가 엑스포 유치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 설

나주 공동혁신도시 조성 탄력 기대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보상문제’가 타결됐다. 나주시와 주민대책협의회는 지난 16일 주민들이 토지 보상에 따른 지장 물자를 수용하는 대신 시행사가 주민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혁신도시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에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었는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충청권 행정복합도시 및 기업도시와 함께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전국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합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착공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규모가 적은 제주 혁신도시가 9월 중순 첫 삽을 뜰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격적이라 할 수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기대는 크다. 나주시 금천면 일대 730만㎡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산하기관을 비롯한 17개 공공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곳에 수용인구 5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효과와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다. 나주공동혁신도시에는 광주와 전남 상생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주대상 공공기관과의 철저한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 중학생 학력평가 실력향상 계기돼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중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력평가는 지난 1986년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학력평가를 실시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그동안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시내권에서도 지역간, 공·사립간 학교별로 학력차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등 공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광주 교육의 현실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지역 교육청도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정부도 이르면 9월부터 초등 4학년~중학 3년생에 대해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진단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인제 양성 없이는 국가나 지역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부실은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져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력평가를 실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중학교 학력평가가 학교간 서열을 조장한다거나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평가는 학력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돼야 할 것이다.

학력평가 실시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역간, 공·사립간 학력 격차를 줄이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질을 높이는 등 광주지역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추미애 내일 민주신당 입당

김효석 “민주와 추가 통합협상 없다”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이 오는 19일 통합민주신당에 입당,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추 전 의원이 19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당 선언과 함께 민주신당 예비경선(컷오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합 후보만이 한나라당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민주신당에 합류하게 됐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3~5일 예정된 예비경

선에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천정배 신기남 김두관 추미애 등 9명 정도가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추 전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효석 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벌어진 통합문제와 관련, “민주당과의 추가 통합협상은 없다”며 “안되는 것 갖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잔류세력과의 통합문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당 전대 앞두고 ‘뒤송송’

사수파 ‘합당 무효’ 실력 저지

18일 합당 전담대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뒤송송한 기류에 휩싸여 있다.

‘100년 정당’을 표방하며 출범한 우리당이 3년9개월만에 “정치적 해체”를 맞는데 따른 착잡함과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당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뒤엉켜있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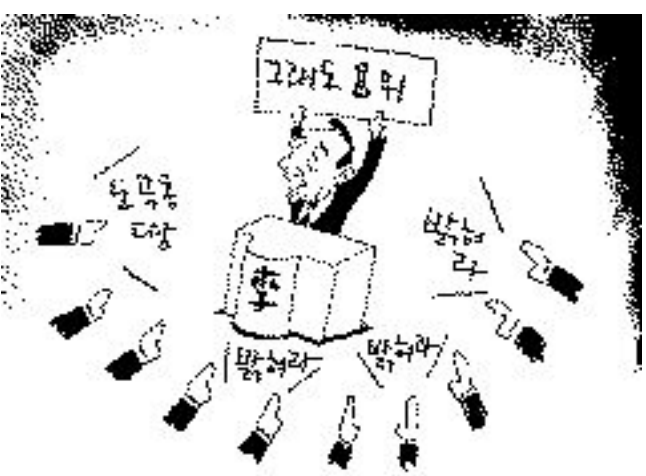
여기에 당내 강경 사수파가 ‘합당 무효’를 외치며 조직적 반발을 가속화하고 합당의

대상인 신당 쪽에서는 우리당과의 당 대당 합당에 반대하는 비노(非盧)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안락의 기류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당 지도부가 1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주재한 마지막 확대간담회에서 정세균 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마지막 공식회의다. 비통한 마음을 감할 수 없다. 4년간 우리당과 함께 했는데 개인적으로 영광도 있었지만 회한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
|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 | | 독자선정·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편집국내선 | 사회 2부 2200-619 | 총무부 | 2200-511 |
|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 문화사업국 | 2200-541 |
| 편집부 | 2200-629 | 문화생활부 | 2200-626 |
| 정치부 | 2200-616 | 여론제작부 | 2200-628 |
| 경제부 | 2200-617 | 체육팀 | 2200-627 |
| 사회 1부 | 2200-618 | 사건부 | 2200-690 |
| (F A X 222-4267) | 조사부 | 2200-570 | |
| | | 총무부 | 2200-511 |
| |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 | 광안국 | 2200-521 |
| | | 판매부 | 2200-551 |
| |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 | 디자인 | 2200-536 |
| | | 서울지사 | 02-773-9335 |
| | | 시업 2부 | 2200-552 |
| | | (F A 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